

# “박근혜 정부 지방재정 정책은 낙제점”

### 더민주 김정우 “복지 지출 5.6조원에 재정확충 2.5조편”

### 재정자립도 7.2%p 하락 45%…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 안행위 국감

박근혜정부 지방재정 정책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해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 등으로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은 크게 늘어나는데 반해 지방재정 확충대책은 이를 충당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지방자

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를 위해 지방 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 확대 하고 이전재원을 축소해 재정자립도를 높 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12월 기획재정 부와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는 ‘중앙-지방 기능 재원 조정방안’을 마련, ▲ 지방소비세율 5%→11% 인상 ▲보육보조 율 15%p 인상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감 면 권한의 지자체 부여 등을 시행했다. 당 시 정부는 이 대책으로 2015년 6조원→ 2016년 6조4000억원→ 2017년 6조5000억 원의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2015년 2조3000억원→2016년 2조6000억 원→2017년 2조700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 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반면,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보 개별급여 전환, 장애인 연 금 확대 등 지방정부 복지지출 부담 증가분 은 2015년 5조4000억원, 2016년 5조6000 억원, 2017년 5조9000억원이나 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즉,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대책으로 확충 규모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2조5000억원에 불과한데 복지공약 이행 에 들어가는 지방정부 재정수요는 같은 기 간 연평균 5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이 다.

그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귀결

돼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2년 52.3%에서 2015년 45.1%로 7.2%p 하락했으며, 재정 자립도는 2012년 77.2%에서 2015년 68. 0%로 하락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했는데 성과는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며 “이는 지난 2009 년 지방소비세율을 16%까지 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행이 필요한 이유다”고 주장 했다. 또 “고소득층 및 슈퍼대기업에 대 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면 소득세할 주민세(소득세에 대한 10%를 주민세로 내는 것)와 법인지방소득세도 동시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양대 노총 간담회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야권, 대선 앞 국정원에 견제구

### ‘시크릿파일 국정원’ 복토크쇼 주요 인사 참석

#### “대공업무 충실 해야”

야권이 12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 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 고했다.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신간 ‘시크릿파일 국정원’의 출판 기념 복토 크쇼에서다. 이 책은 김당 전 오마이뉴 스 편집국장이 20여년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현주소와 개혁방향 등을 정리한 것이다.

이날 토크쇼에서 더민주 추미애 대표 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이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반개탄을 피 워 자살한 사건을 언급, “공정한 의문사 다. 국정원 직원답지 않은 고전적인 방 법으로 자살을 함으로써 그 사건의 전모 에 다가갈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면서 “그리고 나서 국정원 개혁이 논의됐지

만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비 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준비를 위해 국정원이 움직였다고 자신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해서 대공업무나 산업스파 이와 같은 해외 업무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야지 복닥방 업무나 국회의원 사찰 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김홍걸 국민통합 위원장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 령은 30여 년간 정보정치의 폐해를 지 켜보셨고 피해자셨기 때문에 대통령으 로 취임한 뒤 국정원이 바람직한 방 향으 로 가게 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온 뒤 그 분이 과거에 노력하셨던 것도 수포로 돌 아가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의당 당명 유지하기로

### 당원 총투표…70% 개정 반대

정의당이 12일 ‘민주사회당’ 대신 현 재 당명을 그대로 쓰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정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총투표 결과 에 따라 앞으로 정의당명은 그대로 유 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25일 열린 2차 임시당대회에서 ‘민주사회당’을 새로운 당명 후보로 결정하고 당원총투표를 진 행했다. 이는 정의당이 지난해 11월 국 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더 하기)’ 등과 통합하면서 당명 개정을 약 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투표 대상은 투표권을 가진 당 원 2만386명이었으며 지난 6~9일 온라인투표, 10일 현장투표, 11일 ARS투표 가 각각 진행됐다.

투표 결과 ▲온라인투표 찬성 1771 명, 반대 4596명 ▲현장투표 찬성 7명, 반대 22명 ▲ARS 투표 찬성 1581명, 반 대 2934명으로 나왔다. 이를 합산한 결 과 찬성 3359명(30.79%), 반대 7552명 (69.21%)을 기록해 당명 변경은 받아들 여지지 않아 현재의 ‘정의당’명이 그대로 쓰이게 됐다. 이에 따라 정의당과 통 합한 국민모임과 노동정치연대 등의 불 만으로 당내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 靑 제동에도…빛장 풀린 與 비주류 개헌론

### 이정현 “정치 목적 헌법 훼손 안돼”…비주류, 국회 논의 촉구

청와대가 개헌 논의에 대해 제동을 걸었 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연일 개헌 주장과 반박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이슈화 되고 있다.

당내 주류는 개헌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비주류를 중심으로 조속한 개 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개헌론이 당내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은 물론 경우 에 따라 대선 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 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12일 중국 여선에 의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 기 위해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헌 논 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개헌이 가장 잘못된 것은 특 정 정권,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이 주도한 다는 것”이라며 “정략적, 정치적 의도와 목적으로 헌법에 함부로 손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헌은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지금도 개헌 이 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다”고 밝힌 청와대

입장과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비주류 의원들은 이날도 개헌 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내년 4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김성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 ‘개헌 블랙홀’의 반 대 논리에 대해 “1987년 당시 개헌을 했지 만 국가 경제나 서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나빠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 무총장을 언급, “외교·통일·안보·국방 등 외치를 맡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된다면 권 력 분점도 이뤄지고 정치적 부담도 덜 할

텐데 왜 반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의 공개발언을 통해 “지금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일상적인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 다”면서 “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도입한 개헌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학자인 정중섭 의원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이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헌론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군 장성급 8명 중 5명 영남출신…지역편중 개선율”

### 국민의당 김동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동 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12일 열린 육군 본부 국정감사에서 군 장성 인사의 지 역편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4 월 장성 진급자 8명 중 5명이 영남출신 이고, 호남출신은 단 한명도 없었다면 지 금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지역편중 인사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장 8명 중 호남 출

신은 단 한명도 없 다”면서 “인사를 하 다 보면 특정 해에 특정지역 출신이 편 중될 수도 있지만, 지난해 장성 진급자 와 중요 부서장 16 명 인사에서도 호남 출신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강한 육군을 만들 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 특정 출신, 특정 지역이 진급을 독식하는 순혈주의부터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